

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 추경 심사 돌입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 추경 심사 마무리

상임위별 예비 심사 마쳐... 전북자치도 10조5046억·전북교육청 4조7289억원 규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의원)는 9일부터 16일까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본예산 대비 5,138억원 증액된 10조5,046억원 규모이며,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2,267억원 증액된 4조7,289억원 규모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고, 9일 오전부터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본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제1회 추경의 증액된 예산은 집행부에서는 주로 민생성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지방도 확·포

장이나 하천 보수 사업이 그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며, 해당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준비상황과 유치 효과 등에 대해 묻고, 세계잡비대회 등으로 실추된 도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매년 이자 부담이 큰데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예산의 외결로 갈음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면서 신중한 지방채 발행으로 단순히 세출 부족에 임기유연으로 발행하지 말고 건전한 재정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 구제 대책 마련 예산이 미편성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중대 재해 발생 기업을 투자심사 시 페널티를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써 줄 것을 요구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우리 도가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와 청년정책의 준비 상황에 대해 묻고, 청년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참가가 없는 것, 예산 투자가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또한 청년 참여예산제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도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해 묻고, 도민들은 사업장의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데, 도에서의 역할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작년 결산 추경에서 1,07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용지한 것과 올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안정화계정)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또한 도지사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방문했는지에 대해 묻고, 사망사고 현장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하며, 약자의 편에서 세심한 배려로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71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 것과 2024 회계연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추경예산안에 재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교육청 추경예산 본예산 대비 2267억 증액된 4조7289억원

시 시대 맞는 예산 편성·불요불급한 예산 낭비 최소화 주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지난 8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을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267억원이 증액된 4조7,289억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요 삭감 내역은 △학교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1억5,314만원) △교육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2억4,858만5,000원)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지원(5억원) △행복 안심 유치원 지원(1억 5,500만원)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억4,000만원) 등 총 20건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설사업비, 교육복지 사업비, 건강·안전 사업비, 스마트철관 사업비, 늘봄학교 사업비 등이 편성 주요 내용이다.

장연국 위원(비례대표)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사업을 포함한 대응 투자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초 계획대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가 아직도 많다"고 지적하며 학교별 스마트기기 활용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낮은 학교와 교원을 파악하여 스마트기기 활

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 기관평가 사업 관련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평가해 도출된 제도는 장려하고 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시·군 교육지원청 평가 예산은 삭감하는 것보다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슬지 위원(비례대표)은 "체육유공교원 해외연수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보다 스포츠 수준이 낮은 국가를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수 목적에 맞는 국가 선정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선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학교시설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서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예산편성은 문제가 많다"며 지역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교육국 사업의 대부분이 학교 규모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누기식 예산 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확한 산출 근거와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교육위 위원들은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더불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만호 기자

야권 "尹, 하나도 안변했다... 기자회견, 책임 회피로 끝나"

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심자포하... "국민 요구 피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명품백 수수 의혹 포함 고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도 재발의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에 따른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여기에(김 여사) 명품백(수수 의혹 관련 특검)을 포함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 반영된 민심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며 "국민은 '양명주'(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주가조작

의혹)에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는 우리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며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윤 대통령은 왜 70%에 가까운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지하지 않는지, 왜 총선에서 국민께서 심판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심지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정지공세라며,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변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이 하나도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벌거벗은 임금님' 치하에서 3년을 버텨야 하는 국민들의 신산한 삶이 걱정될 뿐"이라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정 방향을 옳는데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한, 총선 직후 국무회의 때 인식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국민들 마음에 가닿은 답변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 권한을 위임했는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버렸다"며 "윤 대통령은 저출생 및 민생 위기와 '채 해병 특검법', 부인 김건희 여사의 '더블백' 수수사건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강행하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뉴스

전북자치도의회 문건위, 완주 초남이성지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9일 제409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 초남이성지 유적 현장을 찾아 국가지정 사적화 추진사항 등 주요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초남이성지는 도지정 기념물 제158호로, 전라도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유항검의 생가터와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권상연의 유해와 유물이 발견된 유적이 있으며,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종교역사를 알 수 있는 학술적·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건위원들은 완주 남계리에 위치한 초남이성지 유적 현장 등을 방문해 국가지정 사적화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였고, 관계자들에게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도내에는 종교문화 등 유산 가치가 높은 우수한 자원



이 많지만, 관심이 부족해 방치되어 왔다"며, "이러한 문화유산과 다른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존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초남이성지 진입로가 협소해 인근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도내 종교문화 유산들을 연계한 순례길 등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